

# 공공기관 정신장애인 차별 조례 수단 목록

## 시설 이용 금지하고 비하 단어 사용·입사 제한 명시 등 인권위, 차별 조항 광주 8건·전남 7건 삭제·시정 권고

광주·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복지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정신장애인의 복지·문화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무원 채용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자치체는 조례 문구에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를 포함시켜 인권단체의 지적을 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차별 조례를 두고 있는 자치체에 해당 조례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6일 인권위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공동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자치별 공공기관 차별 조례 현황(지난해 6월 기준)을 파악한 결과, 광주 8건·전남 7건이

차별 조항이었다. 전국적으로 차별 조항은 422건으로 경북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8건, 강원 38건, 충남 37건, 충북 32건, 부산 30건 순이었다.

광주 차별 조례 조항을 살펴보면 '광주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사용자의 제한)에서는 정신질환자, 전염성질환자, 알코올중독자에 대해 시설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동구·서구·북구는 '부랑인 단속보조 요령'에서 '폐질'(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장애인 비하단어를 사용했다. 광산구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공무원 면접시험의 기준으로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평가해 지적받았다. 서울시는 '의사발표의 정확성'은 말을 잘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정확성'으로 바꿨다.

북구는 '광주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해당 시설에 애완동물 동반을 금지해 맹인안내견과 동반해야하는 시각장애인을 차별했다.

하순군은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신이 박약한 자는 기념관에 입장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여수시, 장흥군, 영암군도 각각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군립도서관 등에서 정신질환자의 이용을 제한했다.

완도군은 정신질환자의 군의회 방장을 금지했으며, 영광군도 공무원 인사규칙에 의사발표 정확성과 논리성을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가 서울 등 대도시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설에 관한 조례에도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었다.

나주시, 여수시, 강진군, 구례군은 학사(학숙)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학생'을 입사 제한과 퇴사 조건으로 명시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자체들이 차별 조항을 두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등을 꼽았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 결정문에서 광주시 서구 등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해당 조례 삭제와 시정을 권고했다.

정수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화·복지시설 사용을 제한하면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임은정 검사 참고인 조사 출석

### “성추행은 갑을·상하·권력의 문제”

#### “조희진 단장 만날 생각 없어”

안모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6일 참고인 조사에 나와 “실체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이날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광주 출신 서지현(45·33기) 검사의 피해 사실에 대해 “서 검사의 인터뷰가 나오자 내부적으로 다 알던 일인데 마치 몰랐다는 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임 검사는 “여자 간부의 성희롱적 발언도 만만치 않다. 성별이 아닌 갑을·상하·권력의 문제”라며 “제도개혁을 해야만 검찰권 남용이 근절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사안도 공수처 도입 등 거시적 안목에서 봐 줘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고 의원에 대해서는 “의혹을 사실로 생각하면 된다. 제 기억은 그렇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서 검사가 성추행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독해 사실을 은폐했다고 요구한 바 있다. 2016년 임 검사가 SNS로 한 검찰 간부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소속 검찰청(의정부지검) 검사장이던 조 단장이 “글을 당장 내리라” 등 폭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임 검사는 이날 진상조사단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임 검사는 최근 조 지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사단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2016년 임 검사가 SNS로 한 검찰 간부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소속 검찰청(의정부지검) 검사장이던 조 단장이 “글을 당장 내리라” 등 폭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조사단은 이날 임 검사로부터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접한 경위와 서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 목격했거나 들은 상황 등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이 사회복지시설인 광주사랑의집 시설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광주시와 서구의 대책수임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36년 지적장애인 보금자리 일방 폐쇄 웬말이나” 반발

### 천주교 인보회서 운영 '광주사랑의 집' 폐지 신고 민주노총, 시청 앞 회견 열고 강제 이주조치 계획 취소 촉구

천주교 인보회가 성인 남성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광주사랑의 집'을 폐지하기로 했다. 길게는 30년 동안 함께 생활해온 장애인들이 타시설로 뿔뿔히 흩어질 처지에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광주지역 일반노동조합은 6일 오전 10시 광주시청 앞에서 사회복지시설 광주사랑의 집 폐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사랑의 집 폐지 절차가 당사자들의 의사는 빠진 채 폐쇄적으로 진행됐다”라면서 “장애인의 강제이주 조치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측에 따르면 천주교 인보회가 운영하는 광주사랑의집은 장애인 23명과 직원 14명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지난 5일 광주시 서구에 시설폐지 신고서를 제출했

다. 천주교 인보회는 수녀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김민철 광주지역 일반노동조합 사무국장은 “광주사랑의 집 여성수도자들이 남성 장애인을 직접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폐쇄를 요청했다”라면서 “30년 넘게 남성 장애인시설로 운영하다가 노동자들과 장애인을 내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주교 인보회 관계자는 “폐쇄 결정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광주사랑의 집에 직접 문의하라”고 말했다. 광주사랑의 집

은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광주시 서구 장애인복지 관계자는 “지난 5일 폐쇄신고서가 접수됐다”라면서 “광주사랑의집에서 첨부한 전원대책 계획에 따르면 무연고자인 장애인 8명은 광양의 한 시설로 갈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 장애인들의 의사를 현재 확인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사랑의 집은 사랑의 선교 수도회에서 지난 1981년 10월4일 광주시 서구 관천동에 행려자 보호를 위해 창립됐다. 1994년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인보회가 인수한 이후 관천동에서 용두동으로 시설을 옮겼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내연녀 몸 불 질러 살해한 도주범 검거

내연녀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은 살인 혐의를 붙잡은 A(61)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6분께 정읍시 신대인읍 한 술집에서 내연녀 B(47)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16㎡ 남짓한 술집 내부도 모두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난 A씨를 정읍시 정우면 한 도로에서 검거했다.

A씨는 얼굴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여 일 전에 미리 인화물질을 준비하고 이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집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와 수법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읍=박기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사산 아기 가방에 방치한 미혼모...형사처벌 면할 듯

사산한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방치한 채 친구를 만나러 나간 미혼모가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이 여성은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

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께 A(19)양은 아기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한 파출소 문을 열었다. A양은 아버지의 실수로 경찰을 찾아왔으며, 당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 아기 이미 숨진 여아를 낳았다고 진술했다.

A양은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놓은 채 잠을 잔 뒤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러

이출했으며, 그사이 딸의 방을 청소하던 아버지가 가방에 든 아기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A양은 지난해 하반기 간기 검사기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산부인과에는 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로부터 시신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5일 “아기는 6~7개월 된 상태로, 사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 소견에 따라 A양은 형사처벌을 면할 전망이다. 사산 아기는 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여서 사체유기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법과 판례에선 분만 개시시를 통틀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3명 적발

### 광주 광산경찰, 불구속 입건

광주 광산경찰은 6일 교통사고를 당한 척하고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로 권모(23)씨 등 3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5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골목에서 누군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것을 발견하고 차 안에 사람이 뒹겨져 있자 경찰에 허위 신고해 보험금 58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일행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와 사고를 낸 차가 골목에 그대로 방치된 모습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차 안에서 사람이 기다리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고를 낸 오모(34)씨는 다음 날 경찰에 입건됐고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보험 접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 등은 거

짓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한방병원에 입주 일찍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 안에 사람이 없었던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오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하마터면...라이터로 옷 실발 제거하다 큰 불 낼 뻔

○~라이터 불로 옷의 실발을 제거하려다 큰 불을 낼 뻔한 40대 여성이 실화혐의로 처벌 위기.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여·47)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7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자신이 거주하는 3층 원룸에 불을 내 옷장 등 실내 26㎡를

태워 800만원 상당 재산피해를 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옷장에서 떨어진 라이터로 실발을 제거하려다 옷장에 불이 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에서 A씨는 “실수로 불이 났다”며 선처를 호소. /김현영기자 young@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b>[아파트]</b>					
2017타경 11603	1	남구 주월동 541-4 무등파크맨션 102동 8층 802호 84.85㎡	아파트	140,000,000 140,000,000	
	2	북구 삼각동 533 110동 1층 101호 59.82㎡	아파트	110,000,000 110,000,000	
2017타경 15292	1	서구 상무공원로61, 401동 1층 104호 [지하철동, 금호타운] 84.985㎡	아파트	224,000,000 224,000,000	
2017타경 65068	1	서구 화정동 857 135동 4층 402호 59.30㎡	아파트	205,000,000 205,000,000	
2017타경 65518	1	광산구 소촌동 791-22 스위트밸리2차아파트 202동 14층 1402호 84.9831㎡	아파트	180,000,000 180,000,000	
<b>[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b>					
2017타경 11269	1	동구 동계천로105, 2층 205호 23.68㎡	근린시설	31,000,000 31,000,000	
<b>[기타]</b>					
2017타경 4223	1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 산19 992㎡ 토소 224-2 1401㎡ 토소 224-3 958㎡ 나주시 다시면 백운길 24 397.4㎡	임야 농지 농지 교외	245,003,930 245,003,930 71㎡매각포함 71㎡매각포함 나만지제시외건물 매각제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및 수목 [동백 나무 등 총 약 26주] 정장 정장 정장 정장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4223	1	토소 24 2층 92.1㎡ 부속건물 면소 10.6㎡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 산21-1 794㎡ 토소 산21-1 1층 41.4㎡ 2층수원면 87.3㎡	교외 임야 창고	634,840,400 634,840,400	
2017타경 8843	1	토소 54.6㎡, 기계기구목욕탕조 나주시 동수동 322-1 2527.8㎡ 제시외 토 2층사무실 171.40㎡ [물건번호 1:공정및광 업재단지당법제6조기계기구포함 [기계기구 강정평가명세표상기호4, 14, 17, 18원제소재 불일치로 평가제외, 소재불명기계기구4개는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지, 사용하지 않아 체 되어 현존 여부 부유할 수 없음-현행서중조]	정장용지 정장	634,840,400 634,840,4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및 수목 [동백 나무 등 총 약 26주] 포함, 기계기구강 정평가명세표상기 호25, 26번제시외 기계기구제외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를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대수신고인인 매각물건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표자가 인사청문회 제140조에 의한 무선신고서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정정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10% 이상으로 실수도 있는 경우 그 공표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는 매수 보증금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표자 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일시 : 2018. 2. 21.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2. 28.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집행부청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식에 비하면 가압입찰에 사전변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과 함께 입찰부문에 넣어 입찰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이상으로 해당하는 공표자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유형계약을 체결한 공표자(입찰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인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계약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서류의 작성방법은 공표된 계약의 제함을 실시하여 매각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대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뿐만 아니라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대수신고인과 최고입찰금수고기일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방법은 입찰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가격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대금지급기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일은 최종 납부기한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제재각을 실시한다. 다만, 제재각기일을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저당차, 변통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서 유예하며, 따라서 제재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 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유증을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유증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의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고, 저당권, 저우차, 소유자 또는 당해 부동산의 부동산 공표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이다.  
8. 주의사항  
① 매각의 목적 또는 선거관청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납부받은 면적 주된목적전용지구를 매각하고 거주하여 있는 위치이다. 사전 저당권 설정을 미친 위치인데 있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매각대금 1주일 전부터 매각당일 정오까지 매수신청서와 동등액의 저당권 설정을 납부한 후 동등액의 저당권 설정을 철회하여 매수인이 매각을 포기할 수 있음이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이다.  
④ 매각대금 납부후에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의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고, 저우차, 소유자 또는 당해 부동산의 부동산 공표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이다.  
9. 공표자  
① 매각의 목적 또는 선거관청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납부받은 면적 주된목적전용지구를 매각하고 거주하여 있는 위치이다. 사전 저당권 설정을 미친 위치인데 있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매각대금 1주일 전부터 매각당일 정오까지 매수신청서와 동등액의 저당권 설정을 납부한 후 동등액의 저당권 설정을 철회하여 매수인이 매각을 포기할 수 있음이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이다.  
④ 매각대금 납부후에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의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고, 저우차, 소유자 또는 당해 부동산의 부동산 공표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이다.  
10. 입찰서류  
① 입찰방식에 비하면 가압입찰에 사전변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과 함께 입찰부문에 넣어 입찰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이상으로 해당하는 공표자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2018. 2. 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신희